

박근혜 탄핵, 직무정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시관에서 비리본 청와대 앞쪽 전광판에 탄핵 투표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투표에서 찬성 234표, 반대 66표, 무효 7표, 기권2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장에 송달됐다.

또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는데,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한편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정본이 접수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자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표결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
23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 던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7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탄핵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자 곧바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재판관들은 전자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재판관을 헌재 배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출장중인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했다.

탄핵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자인 박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7시 20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에게 교부송달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 본격 탄핵심판절차 진행

국회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시
박 대통령은 '불명에 퇴진'
최순실 사태 수사과정서 구속될수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 만료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황 총리 대행 체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야당 쪽에서 신임 국무총리 인선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야당이 박 대통령에 이어 황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

황이다. 이 경우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 받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분경 직무 정지됐다.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향후 관자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불명에 퇴진하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특권이 진행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정치권은 '탄핵 역풍'이라는 대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04년과 달리 이번엔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거세다는 점에서 역풍이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향할 거라는 관측도 상당수다. /김민근 기자

전국 촛불 민심, 해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많은 첫 주말 촛불 집회는 국민의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국으로, 향후 정의구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결의의 장으로 치러졌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 7차 촛불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주최측 추산으로 광화문 일대에는 80만명(경찰 추산 12만명)이 참석했다. 지방 2만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04만명이 집결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옷을 입고 햇살을 손에 꼭 쥘 시민들은 어김없이 촛불을 높이 들며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다.

탄핵 가결의 기쁨을 누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이란 첫 관문을 넘은 만큼 박 대통령 사법처리와 책임자 처벌 등 청와대를 향한 민심의 요구는 더욱 엄중해졌다.

외치는 구호와 피켓 내용도 다소 달라졌다. 시민들 대다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으나 일부는 "국민이 승리했다", "헌재도 박근혜 탄핵", "몰러날 때까지 촛불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담은 목소리를 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질서 파괴, 범죄자 박근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삼청동길 등 3개 경로로 나눠 '청와대 포위' 행진을 했다.

이들은 "시간끌기 어렵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등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면으로 긴 줄을 이뤘다. 이날도 지난 8차 촛불집회에 이어 청와대 100m 앞 분수대 인근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됐다.

지난 6차 촛불집회까지 등장했던 꽃스터커 대신 이날 경찰 버스에는 철정에 갇힌 박근혜 대통령 그림과 재벌을 비판하는 사진, '이러려고 의결했나' 등의 문구가 쓰여진 풍자 스티커로 가득했다. 본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7시



지난 10일 전주시 관동로에서 열린 '제5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한 표정으로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30분부터 종로, 서대문, 청운동길 등 7~8개 경로를 통해 2차 행진에 돌입했다.

2차 집회에서도 자유발언과 풍물놀이 등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시민들이 준비한 화려한 풍물이 일제히 터지면서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북도민 5차 총궐기대회도 승리 자축하는 축제 분위기

축제의 열기는 전북지역에서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튿날인 지난 10일 전주에서 열린 촛불집

광화문 7차 촛불집회
승리·결의의 장으로

송 지사 "박근혜 탄핵은 압도적 촛불민심의 승리"

회는 축제를 방불케 했다. 거리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전주시 관동로에서 열린 '제5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에는 집회 측 추산 7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전 집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촛불은 든 시민들은 환한 표정으로 국회의 탄핵 가결을 반겼다.

평과리와 북, 장구를 든 풍물패가 등장하자, 풍물패는 흥겨운 연주로 탄핵 가결의 기쁨을 알렸다. 풍물패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라고 적힌 종이를 붙대며, 검찰과 특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시민들은 풍물패 장단에 맞춰 행진을 이어갔다.

전북시국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박 대통령이 몰러날 때까지 도민들과 시국 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압도적인 촛불민심의 승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송 지사는 "그 동안 시민행정의 위대한 대열에서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탄핵은 뜨겁고 정의로운 성숙한 시민의식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가치를 증명했다는 송 지사는 "국민들은, 우리 전북도민들은, 국가 존엄과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부도덕성, 비선 권력, 무책임성, 정치적 폄수에 기댄 '국민 기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며 "식지 않고 타오르는 민심(民心)으로 보여줬다"고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송 지사는 "탄핵 가결에 따른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주권재민, 법치질서가 바로 선 국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정치권도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